국회 법사위서 검찰특활비 공개 충돌

野 "절차 위반 나와" · 한동훈 "전 정부 얘기"

민주 박범계 의원 최은순 구속 질의 중 고성 오가기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특활비 공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처리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활비는 수사기관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소수 검찰 간부에 현금 배정되고, 용처에 대한 증빙이 의무가 아니라서 부정사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소송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의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하루 지출 1, 2위가 2월10일과 9월20일이다. 7100만원, 6000만원.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이다. 이런 문제가 기왕 밝혀졌으니 집행지침 공개하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특활비를 공개할 지 정해서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사건 등이 계속 되고 있어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면서도 "물론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니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더 잘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업무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처럼 식별 안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고 한다"며 "그걸 그나마 취재진과 시민단체가 분석해보니 쪼개기 결제 의혹이 나왔다"고 따졌다.

이어 "업추비 절차 위반 사항들이 보여지는 정황이 나왔으니 살펴는 봐야하지 않나.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 감사원장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한동훈 장관은 "말씀취지나 투명성 100%, 이런 것 동의하는데 지난 정부 얘기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 그걸 재탕삼탕 말하는 건 정략적이라는, 타겟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건에 대한 질의에선 고성이 오갔다.

박범계 의원은 최은순씨 구속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양형 이유를 읽으며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동문서답으로 답한다"며 "법무부 장관 답게 좀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여기(회의장) 소리 지르는데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장관 답변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다 내가 그동안 소리를 질렀나"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자주 질렀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제가 여기 의원의 훈계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자 박 의원은 "내가 왜 훈계를 하나.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경전을 빚었다.

권칠승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선언한 것에 대해 물었다.

권 의원은 "국책사업을 장관이 백지화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독자적 결단이다. 인사 책임도 각오했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다. (감사실시를) 결정한 건 아니다. 절차에 따라 보겠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조속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건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장관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 향후 국책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에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시 최초 인사청문회 내달 8일 확정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채행석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경구 의원이 위원장, 서동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한경봉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내달 8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간 '군산시 산하 출자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집행부의 요청으로 군산시 최초로 개최하게 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 수해 후속절차 만전

군산시의회가 지난 24일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재난지역 추가선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한 데에 이어 수해피해 복구 작업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해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집중호우 관련 대피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나서 대피명령을 발령했던 모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대피명령으로 친인척 및 일시 거주시설 등에 묵고 있는 주민들은 대피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숙박 및 식비가 추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이 동일한 금액이 아닌 차등지급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또한 비가 지속되면서 복구작업이 지연되어 대피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불편사항 및 개선안을 건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주호 "내달 말 교권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장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제안으로 교사들 만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79%가 가입한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김광수 교사(경기 안산시 별망초) 제안으로 현장교사 16명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당연히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필요하지만 한 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이 빠져 교실에서 여러가지 교권침해의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달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간 기록물 체계적 수집 · 관리 제도화

송승용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 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돼 빠르면 8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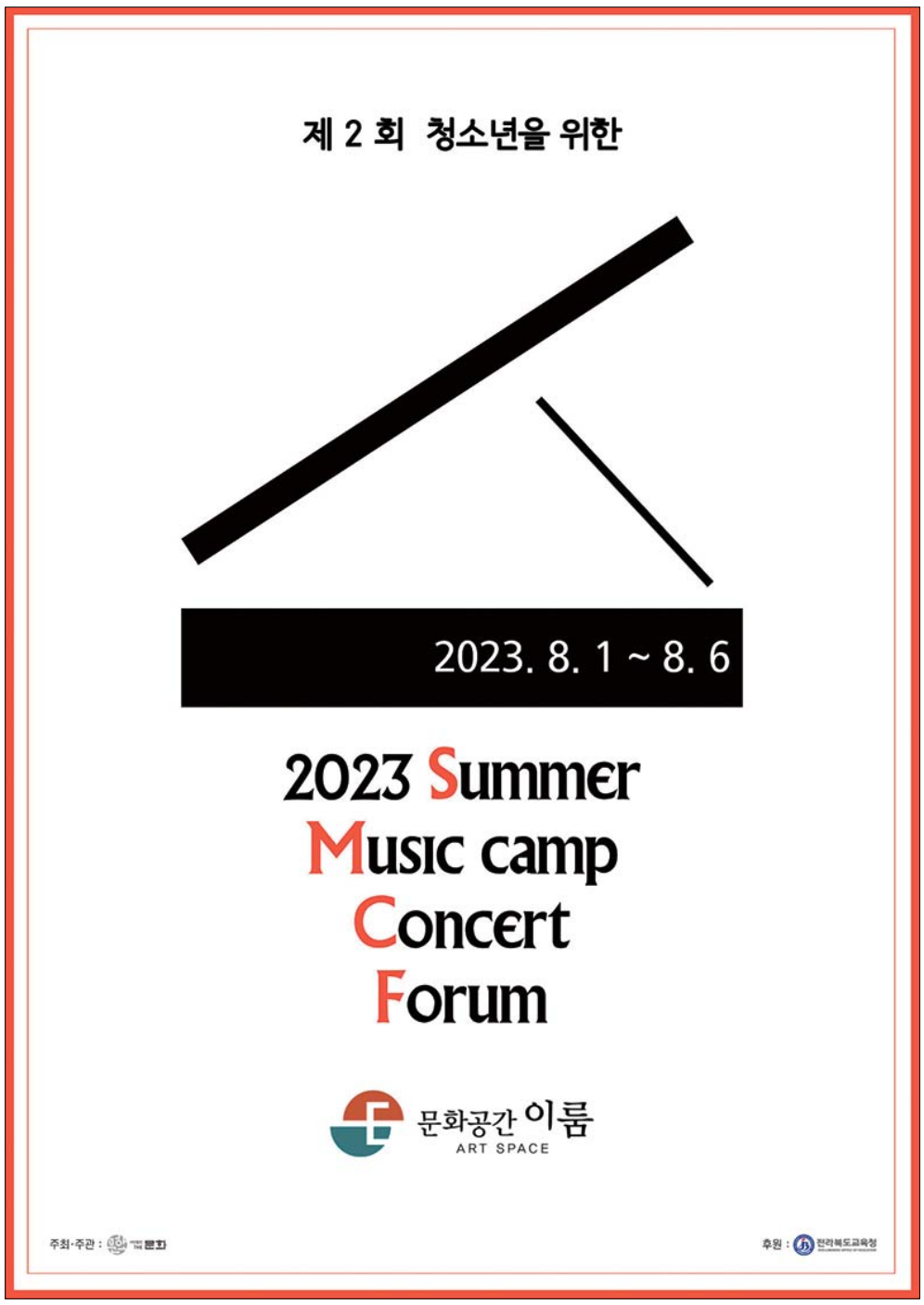
전북 크루즈산업 육성 · 지원 근거 마련

김정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이번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